

대통령, 오늘부터 청서 업무… 3년7개월 만



다시 청와대로

① 용산서 옮겨온 ‘봉황기’

대통령실 공식명칭 ‘청와대’ 바꾸고 업무표장 역시 과거 로고 다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공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용산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도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청와대

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있는 곳(주 집무실)’에 상시 게양된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변경된다.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대통령실’과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집무실 이전을 연내 마무리한 것도, 올해까지 ‘국가 정상화’에 매진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민관에 집무실을 뒀다. 이는 본관과 여민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구중궁궐’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의 단점을 상쇄하려는 취지다.

/서예진 기자 syj@

韓,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참전
산업협력 패키지 ‘G2G 카드’ 꺼내

산업부, 국방 비롯 에너지 분야 등 협력 패키지 구성, 캐나다에 제안
경쟁국 독일, 정부차원 패키지 대응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 수주전을 놓고 정부 간 협력(G2G)을 축으로 하는 수출산업협력 패키지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방산 선진국의 ‘산업협력 패키지’ 카드에 밀려 몇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향후 정부의 관련 지원을 얻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패키지)을 마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해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구성해 캐나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산업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실은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을 통해 정부차원의 산업협력 지원이 제한적이고 성능·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방산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산업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고,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주전 결과도 ‘패키지 경쟁’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최종 단계까지 경쟁했지만 탈락했다.

폴란드 조선·해군 전력 전문 포털 스토포니아 포털은 지난 11일 평가의 무게 중심이 잠수함 성능보다 경제적 의무와 산업 패키지(오프셋)에 있었다고 짚었다. 투자·협력·폴란드산 구매·산업 참여 등 경제·산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 D현대중공업은 2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CPSP 선점을 위해 독일은 이미 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독일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액화천연가스(LNG)·수소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지난달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도 산업 패키지가 협상력을 좌우한 사례가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주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자 호주산 철광석 활용과 대규모 구매 연계를 제안해 협상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이민자 비중 10%p 증가하면
지역서비스 물가 0.6% 하락

산업연구원, 이민자유입 물가 영향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 영향 없어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하락 효과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민자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평균 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노동공급 ▲수요구성 ▲수요규모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물가 하락 효과는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즉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됐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자유입이 비용 압력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의 미 있는 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라 교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차료 역시 교육 수요 둔화로 인한 교육 여메니티(쾌적성) 약화가 주택 수요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일부 비가공 식품품 등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단기 공급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서 이민자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